

# 經濟展望

불확실성의 시대, 미·중·러·유럽의 전략

**미국·트럼프 정책의 부작용**

## 생산기지 이전, 소비자·노동자 후생만 악화시킬 것

나지원 동아시아연구원 연구원

미국 외교협회(CFR)는 ‘2017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불확실성이 리스크를 키우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 큰 문제는 불안한 고용과 성장, 금융시장에서 비롯되는 민심 악화에서 자유로운 국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남미 국가들은 실질임금 감소와 고도의 인플레이션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여전히 부실채권에 허덕이는 한편 체질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사실상 0% 금리 정책 기조를 통해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각종 재정정책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독일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 확장을 원치 않는 반면,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이미 공공부문 부채가 과중한 모순적인 상황에서 영국은 브렉시트를 선언했다. 이언 베고 연구원은 “지금까지 브렉시트의 악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본격적인 탈퇴 협상이 시작되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CFR 보고서는 이러한 만성 불황의 해법을 중국 정책 변화에서 찾고 있다. 중국이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완화 등 고전적인 경기 안정책으로 지난해에 급한 불은 끄지만 대출 주체가 공공기관에 집중돼 있으며 국내 총생산(GDP)의 50%에 육박하는 높은 저축률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민간 소비를 적극적으로 진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 내 경제 문제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대니 바하트 연구원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평균 관세율 비교를 통해 35%의 수입관세율이 얼마나 비

현실적인지 지적하면서 “국제무역론 기초 지식만 있어도 이런 정책이 미국 소비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도리어 후생 수준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미국에서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던 제품을 만들더라도 비용과 가격 상승으로 구매력은 떨어지는 반면, 교역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초래해 남아 있던 미국의 수출산업마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데이비드 달리 선임연구원 역시 제조업 부문 일자리 감소는 기술 진보에 기인하므로 트럼프 정책이 일시적으로는 제조업 고

**미국서 공장 세워 제품 만들어도  
비용·가격 올라 경쟁력 떨어지고  
교역 상대국 보복 조치 부를 경우  
남아 있던 미국 수출업계도 타격**

용 증가를 가져오더라도 제조업 부문 생산성이 서비스 부문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한 제조업 부문 고용은 다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무역수지 적자 완화를 위해 관세율을 높이면 결국 통화까지 상승으로 귀결되면서 오히려 미국 수출품에 세금이 붙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해악이 분명함에도 왜 트럼프에게 열광하는가. 헤리티지재단의 ‘2017년 경제 전망’ 보고서는 이렇게 진단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GDP 성장률과 실업률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 문제는 2008년 경제 위기로 추세선 아래로 이탈한 GDP 성장곡선이 원래 궤도로 다시

반등하지 못한 수준에서 성장률만 ‘정상화’된 것이다. 4%대에서 안정된 실업률 역시 경제활동인구 자체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착시효과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임금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데 비해 생활비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체감경기와 생활수준 악화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기술혁신과 함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완화와 철폐가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처방한다. 단기적 해결책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생활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과 구매력을 증진시킬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민간부문 투자 확대라는 해법은 트럼프가 공언했던 보호주의적 경제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상충관계에 있다는 게 문제다.

트럼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선언은 미국뿐 아니라 역내 국가들에게도 정치·경제적 문제를 가중시킬 것이란 점이다. 우선 경제 협력을 통해 안보 위협을 완화하던 상호의존적 구조가 안보와 경제의 분리로 인해 노골적인 경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역내 국가들의 안보 리스크와 비용이 동시에 증가한다.

패트릭 오코너라는 가명으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기고한 외국 외교관은 “장애물이 더욱 많아졌지만 남은 회원국들이 TPP를 지속해야 하며 미국도 너무 늦기 전에 협정에 복귀해야 우방의 신뢰를 잃지 않고 역내 경제·안보 체제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이와 반대되는 조치를 거침없이 내렸다. 2017년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은 미국 자신의 국내 문제라던 지적이 경제 분야에서도 어김없이, 그리고 불길하게 들어맞고 있는 것이다.

**중국·구조 개혁에 초점**

## 미국과 통상 전쟁도 염두, 적극적 환율

양갑용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교수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16년(3.1%)보다 약간 상승한 3.4%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경제와 신흥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중국 경제는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 등 금융기관들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6.2~6.4%로 예측하는 것과 달리 중국사회과학원을 비롯한 중국 내 주요 싱크탱크는 대체적으로 분기별로 각각 6.5~6.7%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올해 중국 경제는 명목투자와 실질투자 증가율이 각각 8.9%, 9.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명목소비와 실질소비 성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부문 제조업 투자 위축이 심각해지면서 국유 부문의 사회간접투자가 크게 늘었지만 투자 회수율은 낮은 상태다. 지속 가능한 투자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반면 온라인 쇼핑과 문화 부문의 소비 증가는 소비구조의 고도화를 견인하면서 견고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소비 증가세의 회복은 국민 개개인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악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내수 면에선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 전망치를 보면 2.2% 상승하고 지난해 2.1% 하락했던 생산자 물가지수는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소비시장에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 측 개혁’의 효과와 원자재 가격 회복에 따른 것이다.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기업 이윤율 회복이 지속되고 실질 채무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총부채의 절반을 차치하고



지난 3일 중국 지린성 창춘 증권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불확실성 속 성장 모멘텀 유지  
부동산 거품·금융리스크 대처  
6.5% 안팎의 성장률 달성 기대**

있는 국유기업이 수혜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 회복이 지체된 상황에서 각국의 화폐정책이 분화됐고 신흥시장의 금리가 상승했으며 미 연준(Fed)도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미 이러한 변화는 실물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국제 벤처투자의 하락, 신흥시장의 금융 취약성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주식시장도 부분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으나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미·중 관계의 방향 설정이 글로벌 금융 위험을 완화시키고 위기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중앙포토]

**유럽·비틀거리는 유로존의 3위 경제대국**

## 이탈리아 저성장 탈출이 유로존 존립에 매우 중요

고주현 연세대·장모네EU센터 연구교수

2017년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영국 경제를 주목해야 한다. 유로존의 3위 경제대국 이탈리아는 저성장의 장기화로 경제 규모가 2000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탈리아 경제가 2016년(0.9% 성장)에 이어 2017년에도 0.7%의 저성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각한 은행 부실 문제가 실물경제 회복을 제

약하고 있어서다. 이탈리아는 정부 재정도 취약해 지난해 말 기준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5%에 이른다.

이탈리아 경제가 ‘유럽의 병자’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럽개혁센터(CER)는 유로화 가입 이후 경제 정책의 독립성 상실과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한편 뱅키에 소재 싱크탱크인 CEPS는 저성장의 장기화와 정부재정 악화가 이탈리아의 은행 부실을 심